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2
----------	------

발의연월일 : 2024. 8. 22.

발 의 자 : 차규근·김영환·김준형
신장식·김재원·정춘생
황운하·오기형·서왕진
김남근·김남희·김현정
한창민·이해민·조 국
박은정·김선민·강경숙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이하 이 항”을 “이하 이 조”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이하 이 조에서 “할증평가비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증평가비율에 가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최대주주등은 결정된 할증평가비율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재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주주등(<u>이하 이</u> <u>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u>) 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 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 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u>100분의 20</u> 을 가산 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 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이하 이</u> <u>조</u> ----- ----- ----- ----- ----- ----- ----- ----- ----- ----- <u>100분의 20(이하 이 조</u> <u>에서 “할증평가비율”이라 한다)</u>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증평가비율에 가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최대주주등은 결정된 할증평가비율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할증평가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재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